

##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남북경협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msyang@kyungnam.ac.kr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를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경제개혁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가 주민들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즉 공개화·제도화되지 않은 시장화이며, 북한 당국은 시장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허용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데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런 것은 1990년대 북한의 시장화 초기 때 이야기이다.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내지 체제전환에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며,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시장화라고 부르는 현상과 내용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화는 개혁개방 이전의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 단계가 아니라 경제개혁 내지 체제전환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공개적 성격 및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는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인 경제개혁과 차별되는 현상이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시장화는 북한식 경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시장화의 최대 특징은 당국이 시장화를 주도 내지는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단계 북한 시장화의 가장 큰 동력은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시장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이다. 시장화를 통해 민간이 창출한 각종 잉여를 정부가 광범위한 조세 및 준조세를 통해 수취하는데, 이 규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시장화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북한 당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가 김정은 시대 들어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계성도 노정하고 있다.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화는 크게 진전되고 있는 반면, 금융·노

동·자본재 시장은 그 발달이 뒤쳐져 있다. 비록 대외무역의 확대와 시장화의 진전으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확대되고 내수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국민경제적 수요의 증가가 기업을 비롯한 공급측 반응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는 그 발달 자체, 나아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등의 측면에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남북경협을 위한 여건이 종전보다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체제는 남북경협에 대해 주요한 제도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장경제체제 및 시장경제적 상거래 관행에 대한 북한 당국 및 북한 국영기업·주민들의 이해·경험 부족은 남북경협을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남북경협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높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가 통상적인 체제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시장화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북한 당국 및 북한 국영기업·주민들의 이해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이들은 원가와 이윤, 수익성의 개념을 서서히 몸에 익혀가고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경험하고 있다.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계약의 중요성도 점차 학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종전보다 수월해져 남북경협을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및 취약한 내수기반도 남북경협에 대한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의 민간부문에 화폐자산이 일정 정도 축적되고 내수기반도 미약하나마 형성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북한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경협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등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시장화는 종전보다 크게 진척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외부 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완화·제거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화는 북중무역 및 북중경제협력을 통해 핵심 동력을 얻어 왔지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된다는 고민이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당국 모두에 유인이 존재한다. 북한으로서는 시장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유인이 존재한다. 남한으로서는 시장화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주된 목표의

하나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였는데, 시장화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 특히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경협은 ‘접촉을 통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를 매개로 한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득이 되는 이른바 win-win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타의 교류협력사업보다 우리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 완화를 통해 남북경협의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자. 당시 북한의 시장화 수준이 걸음마 단계였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화 수준은 최소한 청소년 단계로 올라와 있다. 현재 우리의 남북경협 정책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10년 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며 나아가 거의 다 받아들이는 경제주체들, 특히 국영 기업 및 노동자들이 10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의미도 된다.